

김정은 시대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속:

'중국 대북포기론'의 담론과 실천

차례

I 서론	IV 미국과 한국 미디어의 '중국 대북포기론'
II 연구방법	담론 재구성
III 중국 내 대북포기론 담론	V 중국 '대북포기론'의 외교적 실천
	VIII 결론

주제어: 중국포기론, 담론, 북중관계, 중국외교정책

김지영

(서울대학교)

한글초록

본 연구는 '담론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김정은 시대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행태에 따른 중국의 대응 - 1,2,3 차 핵실험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대응-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반해 이 연구는 중국의 미시적인 부분인 국가의 대북정책과 시민사회의 엘리트들의 북한정책 담론을 분석하여 중국의 대북 정체성과 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2013 년에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중국 국내외에서 제기된 '중국의 북한포기론'담론과 실천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I. 서론

2011년 북한 김정은의 집권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냉각기였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했고, 4대은행의 대북관련 금융업무를 중단시켰다.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의 숙청은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악화를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고 평가된다.¹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주석은 역대 지도자 중에서 취임 이후 북한이 아닌 한국을 최초로 방문하였다. 시주석의 한국 최초방문은 악화된 북중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중국 고위급 정치지도자의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간의 냉각기는 해소되는 듯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7월 국가부주석 류원산(李源瀚)을 북한의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 행사에 대표로 보낸다. 더 나아가 2015년 10월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내 서열 5위의 류원산(刘云山)의 방문은 북중 양국간의 냉각된 관계의 해빙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는 10월 9일 사설에서 '외부는 물론 중국 국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북한 포기론을 주장했지만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도하였다.² 특히 2015년 10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부 경제개혁과 개방에 치중하는 것도 류원산(刘云山)의 북한방문의 영향이라고 해석되기도 했다.³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과 북한 관계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혈맹에 기반을 둔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정상적인

¹ 이성현은 장성택 숙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성택숙청 이후 숙청의 원인을 북한 정부가 장성택의 매국행위를 규탄할 때 '중국'이 아닌 '외국'이라고 절제한 점과 중국정부가 장성택 숙청에 대한 북한의 내정이라고 명시한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성현. (2014). 장성택 숙청과 북중 관계의 관성. 성균차이나브리프, 2(1), 116-121.

² 경향일보, '류원산 중 상무위원 평양 도착...환구시보 "중국은 북한 포기할 수 없어'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91453231&code=970204

³ 연합뉴스, '중국 '서열 5위' 류원산 방북...북 무력도발 자제할 듯'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1005004500038/>

국가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⁴ 정상적인 국가관계라 함은 중국의 대북한 관계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이익에 둔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사회주의 이념이나 1 세대 정치지도자들이 항일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축적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⁵. 둘째,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탈냉전시기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2013 년 북한의 3 차 핵실험과 장성택의 숙청이 후 양국간의 관계를 가장 심각한 국면에 처했었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흥규는 자신의 연구에서 중국의 ‘신흥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하에 중국내의 토론과정에서 북한 “전략적 자산론”, “전략적 부담론”, “전략적 함정론” 등이 혼재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⁶. 실제 중국정부는 4 대 은행의 대북업무를 불허했지만, 지방은행의 대북업무는 묵인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교류는 지속되었다.⁷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투표를 했지만 미국의 강도 높은 실질적인 제재방안 논의에 대해서는 피했다고 미국의 고위급 정책결정자는 주장한다.⁸

⁴ 김흥규 (2013).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전략연구, 193-225. 이동률 (2014)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변화 논의,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Vol.2(3)

⁵ 중국의 냉전과 탈냉전 시기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제된 미국문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38 선 이북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1950 년 9 월 15 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1951 년 10 월 3 일 주은래(周恩來) 중공 외교부장은 인도 대사 파니카를 통해, 한국군만 넘어올 경우 중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엔군이 38 선을 넘어 올 경우에 참전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만의 '차이나 로비'가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고, 맥아더의 대만지원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현실주의적 판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맥아더, 한국전쟁기간 중국연안 침공 확전 위기 문서발굴'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51015060702586>

⁶ 김흥규 (2013).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전략연구, p. 71

⁷ Scott Snyder 는 2013 년 북중간의 경제교류 지표를 통해 3 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간의 경험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hina-North Korea Trade in 2013: Business as Usual" 24 March, <http://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14/03/27/44/2014>. 미국 CSIS 고문인 마이클 그린은 중앙일보 사설에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미약한 중국의 경제재제 현황과 베이징 정책결정자들의 정보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중국의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는 없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중국의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는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2245830>

⁸ Taylor, Brendan 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의 고위급 대북정책결정자들이 유엔회의에서 만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oes China Still Back North Korea?" Survival 55.5 (2013): 85-91.

중국 공산당의 거시적인 대외정책원칙의 수사적 변화나 국가의 외교행위만을 관찰하면, 실제 중국정책의 변화의 성격이나 방향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냉전시기에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주되게 정부 내 정책결정자의 논의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탈냉전시기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의 규모가 더 이상 국가나 공산당 내의 인사들만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공산당과 행정부의 법제화와 당내의 민주화로 인해 복잡다단한 경제와 군사외교적 이슈에 대해 학자들과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을 받아들이고 있다. 탈냉전 시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력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외교정책은 과거처럼 몇몇의 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외교정책과정에서 학자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비정부 행위자의 담론을 분석하여 중국의 대북 정체성과 정책의 변화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2013 년에 제기되었던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대한 학자집단의 담론을 중심으로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3 년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중국, 한국, 서방의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정부가 김정은 북한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범적 제안과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적 예상을 제기하였다. 과거엔 내부분견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인터뷰를 근거로 서방이나 한국미디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논쟁은 공개된 형태로 중국 TV 나 신문 지면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의 부정적 측면, 중국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환, 북한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비판적 평가 등의 제언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른바 200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북한 포기론'의 진화된 논쟁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변화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성격과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환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최근에 중국, 한국, 서방에서 제기된 '중국의 북한 포기론'의 담론과 실제 중국의 대북정책의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김정은 시기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논쟁에서 시작된 '중국의 대북포기론' 담론의 구성과 재구성 및 확산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과거시기 중국외교정책의 담론분석이 정부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부의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이 미치는 학자집단과 정부행위자의 담론을 함께 살펴본다. 기존의 중국 대외정책 연구에서 담론분석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과 서방의 담론생성 메커니즘이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과 달리 서방 국가들의 담론 생성, 확산, 재구성의 과정이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다. 중국은 형식적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어 정치 담론의 영역도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미디어가 일원적으로 통제되기 보다는 계파간 다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담론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서방의 민주주의 시스템과는 다르나 공산당 내 세력간의 정책경쟁이나 정치투쟁이 담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대외정책과 정치의 다양한 담론의 형성으로 인해 담론분석 방법은 중국의 정책이나 정치연구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환 혹은 세력경쟁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직면하고 있는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대북담론과 외교적 실천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관계 정체성 변화의 분석은 탈냉전과 냉전의 혼재된 동아시아의 복합적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동아시아의 지경학적인 질서는 냉전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단일한 지역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시기 적대국이었던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와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지도를 그리고 있다. 탈냉전시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국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포함한다면

북한도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경제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질서와 달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는 한반도를 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정치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Pivot to Asia'를 선언하며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은 두 축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내재된 냉전질서의 지속과 변화는 강대국과 중소국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 변화는 동아시아에 내재되어 있는 냉전질서를 측정하는 중요변수이다. 많은 학자들은 두 나라의 이념과 공통의 역사를 매개로 한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관계로의 두 나라 사이의 국가관계 정체성이 전환되었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간의 관계 정체성 전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은 동아시아 지역내 냉전과 탈냉전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북정체성과 외교정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탈사회주의적 변화와 직결된다.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을 포함한 새로운 동아시아 지정학적 질서와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중관계의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변화를 중국의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담론을 통해 동아시아의 복합적 질서를 전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북한포기론'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교행위의 성격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중국의 북한포기론' 논의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자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화된 비정부 영역만의 담론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내 북한과 관련된 1 차 담론의 담론생산자를 정부와 비정부로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존 연구들이 중국정부 행위자의 외교담론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서양과 한국에서 재생산하는 담론의 생산주체가 중국정부인지 비정부 행위자인지를 구분하여 서양과 한국에서 재해석된 '중국의 대북포기론'의 2 차 담론의 합리성과 정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탈냉전시기 중국외교 담론들이 (1) 중국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구성 및 재구성되는지 (2) 중국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담론이 어떻게 서방이나 한국에서 재구성되는지 (3) '중국의 대북포기론' 담론과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의 실천적 측면을 비교설명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시기는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시기이다. 단 2장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탈냉전 시기의 전반적인 중국의 대북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김정은 시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게 냉전과 탈냉전시기 대북정책의 차이와 탈냉전 시기 중국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실증적 사례분석의 연구범위는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대북정책의 담론과 실제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공간적 연구범위는 중국, 한국, 서방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정부 관료와 중국학자의 대북담론을 1차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재구성된 담론을 2차적으로 다루어 어떻게 중국학자의 담론이 한국과 서방에서 재생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 프레임은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한 담론과 실제 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은 중국 공산당 외교부, 관영언론, 지도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과 김정일 사망시에 중국 외교부와 관영언론, 학자들의 담론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포기론이 절정에 이르렀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디어 등장한 중국의 대북담론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이론화를 위해서 기존에 담론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론은 정치지도자나 정책결정자의 인식, 생각, 믿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의 이중적 개념을 둘 다 사용한다. 첫째, 행위자 분석을 위한 담론개념을 통해서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아이디어를 분석한다. 둘째, 행위자의 정책이나 정치적 도구로서 담론개념을 통해서, 실제 정책과의 상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한국, 미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른 ‘중국의 대북포기론’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연구한다. 어떻게 김정은 정권 시기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의 담론과 실천을 비교하여 중국의 외교담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교정책 연구를 위한 담론분석 방법론은 다양하게 발전되어왔다.⁹ 실증주의 담론연구는 레토릭이나 텍스트 연구의 양적통계방법을 중시한다 (McAdam, 1996). 외교정책과 관련된 언어의 양적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생각이 어떻게 국가의 행위에 반영되는지를 연구한다. 탈실증주의 전통의 담론 연구는 질적방법론에 속한다. 언어 자체의 양적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담론이 사용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생각, 문화, 규범이 어떻게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코(Foucault, 2012)는 어떻게 권력이 행위자에 의해 담론에 반영되어 실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보여주었고, 데리다 (Derrida, 1978)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떻게 담론을 통해 기존 담론 체계를 해체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미국 외교정책 연구의 깊이 있는 후기구조주의적 담론연구를 제공한 데이비드 캠벨 (Campbell, 1992)은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 개념을 적용하여 어떻게 미국에서 외교정책이 담론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Writing security'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실증주의적 담론분석은 개인의 '이미지'나 '인식프레임'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실증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에게 담론은 '인식전략의 노력'들을 의미하는 프레임이나 인식적 도식으로 이해된다. '인식전략의 노력'은 세상과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 진다. 담론은 집단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기화한다 (McAdam et al, 1996, 6). 실증주의자들은 담론을 주되게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이해와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 (Snow and Benford, 1988). 정책담론은 규범과 핵심개념을 정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준수해야 할 방법들을 설명하고, 사용하는 정책적 도구를 개발하고, 주어진 정책영역에서 국가정책의 논점을 설정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한다 (March and Olsen, 1995, 45-46). 슈미트 (Schmidt, 2002, 210)는 생각의 측면에서 담론은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하는 인식적 역할과 국가의 가치기준에 준하는 정책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실증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있어 개인의 인식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골드스테인과 코헨 (Goldstein and Keohane, 1993) 은 '인지 심리학은

⁹ 담론은 정체성 자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여주는 요소이며,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양한 철학과 이론의 바탕에 의지하는 담론의 주제와 다양하게 연관된 개념이 있다. 이것들은 실증주의자와 경험주의자들 (McAdam 1996), 탈실증주의자; 후기막스주의자 (Althusser 1969; Pecheux 1982; Zizek 1994), 후기구조주의자(Foucault, 1972; Derrida, 1978; Campbell, 1992), realist (Harre and Madden, 1975; Bhaskar 1978; Stones, 1996), 비판적 담론 분석(Fairclough, 1989).

사람들이 전형적인 합리성이 부재한 정보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인지심리학은 도덕의 원칙을 반영하고, 행동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믿음을 연구하는 인과적 관계를 명시하는 개인의 생각을 다룬다.

인지의 담론은 새로운 해석의 담론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레보우 (Lebow 1994)는 감정과 인지가 어떻게 합리적 역제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체계적인 인지편향은 정책결정자를 부적절한 도박을 하도록 만든다 (McDermott, 1998). 저비스 (Jervis, 1989)는 인지편향은 정책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는 오해들을 일으킨다. 저비스는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재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고 강조한다.

탈실증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에 비해 좀 더 복합적인 담론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들은 담론을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연관짓고, 사회와 정치적 세계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탈실증주의자들은 담론의 존재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는 내재하는 성질과 본원적인 인과적 역학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데리다(Derrida, 1978)는 모든 인간과 사회의 경험은 구분의 논리에 따른 문자 혹은 글쓰기 방식의 담론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푸코의 담론분석은 '담론의 실천'과 비담론의 행위적 결합체의 연결을 보여주려 한다 (Foucault, 1972). 이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담론은 상징적 체제, 사회질서들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며, 담론분석은 그들의 역사적 정치적 구성과 기능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담론 형태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서 담론분석가들은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연설, 보고서, 정치리플렛, 역사적인 사건들, 인터뷰, 정책 그리고 생각들이 담론분석가들의 분석재료가 된다. 탈실증주의 담론분석과 함께 밀리켄(Milliken 1999)은 네 가지 국제관계의 담론분석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해체(deconstruction), 병렬(juxtaposition), 정복된 지식(subjugated knowledge), 계보학적 방법(genealogical method). 이러한 담론분석방법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병렬(juxtaposition)과 계보학적 방법(genealogical method)을 사용한다. 외교술, 대중조직에 의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된 담론이 정책적 실천을 형성하는지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페어클라오프 (Fairclough, 2001)와 슈미트 (Schmidt, 2001)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유명한 페어클라오프는 담론과 실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영국 블레어 정부의 외교정책분석연구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페어크라오프는 영국 블레어 정부의 담론과 실천의 이중전략(two track)을 분석하여 영국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담론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담론이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어떻게 국제관계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할 때, 페어크라오프는 담론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블레어 정부가 내세웠던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담론과 달리 어떻게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블레어의 정책실현과 담론방향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블레어 정부의 담론을 정치적 도구로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과 실천의 이중전략은 중국의 대북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정부와 학계의 강경한 대북담론이 어떻게 중국의 실제 대북정책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 페어크라오프의 이론틀을 발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담론 자체의 언어적 연구와 담론의 생성, 유통, 확산의 과정 그리고 담론형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분석은 사회문화의 광범위한 변화 자체이며,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페어크라오프는 담론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사회문화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담론의 변화 자체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Fairclough, 2001, 19). 특히 사회에서 하나의 생각에 대한 의미들과 그 의미의 실천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형성에 의해 자연화되는 결과에 주목한다. 저항은 대부분 담론의 명령과 기관의 위치에 있는 주체로부터 온다.

둘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담론의 역할과 국가별 특성을 연구한 슈미트의 담론주의적 구성주의를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슈미트 (2001)의 연구는 세 나라의 국가의 이해관계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나라별 복지 담론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각 나라의 정책실현을 위한 담론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슈미트의 연구는 담론이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슈미트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중국의 대북담론이 중국, 한국, 미국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생산과 재생산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 포기론 담론의 본질적 측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담론의 개념 및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중국 외교정책연구의 담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중국내 국가간의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치에서 담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북한 포기론'이라고 하는 담론이 어떤 행위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제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중국 내 대북포기론 담론

중국 내 북한포기론 1차 논쟁

2009년 북한의 2번째 핵실험 이후 중국학자와 전문가 집단내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에 관한 대규모 논쟁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단은 중국 국가이익의 관점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중국정부는 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을 통해 협력적 관계의 바탕에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을 통한 포용정책은 중국에서 광범위한 정책논쟁을 촉발시켰다. 2009년 4월 주요미디어와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에 도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핵심질문은 북한이 2차 핵실험으로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였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자와 자유주의 학파로 대변되는 "전략중심론자"들은 중국의 자신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좀 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자와 강경한 정책생산자들로 대변되는 전통주의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중국은 오래된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핵실험과 함께, 20명의 중국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2009년 5월 26일자 환구시보 인터뷰(global times) - 국제정치에 관한 민족주의자들의 관점을 가진 신문-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 강력한 중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에서 정책 전문가들(circle)사이에서 '전략주의자'들로 불린다. 이들의 중국이 미국과 협력적으로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전략지도를 그리는데 집중한다. 좀 더 확장하면, 이 전문가 집단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둔다. 이 학파의 학자들은 중미관계에 주되게 집중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청화대의 쑨저 (Sun Zhe), 복단대의 렌샤오(Ren Xiao), 중앙당교의 장런꾸이(Zhang Liangui)도 이 집단에 포함된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정부가 미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위협에 자주 스스로를 노출키시고, 중국의 국익을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고립된 일들을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주의자'들의 관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는 몇 년 전부터 북한에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도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2 차 핵실험은 중국의 뺨을 때린 격이며, 이것은 그들 우려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핵실험의 위치가 중국과의 국경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공격적인 군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대응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지역안보 이해에 도전이 될 것이다.

북한이 6 자회담으로부터 탈퇴하자 '전략주의자'들의 주장이 중국의 미디어를 즉각적으로 지배했으며, 5 월 25 일 2 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이것은 중국정부 내에 어떻게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양성되었다. 새로운 전략은 베이징이 두 집단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했고, 경쟁하는 두 개의 국가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우위에 두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평화, 안정, 비핵화) 더 나아가 많은 중국인들은 6 자회담의 기본적인 전제인 북한의 핵야망이 협상 가능한 것인지, 적당한 가격에 조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3 차 핵실험과 중국의 '북한포기론'담론

2013 년 2 월 12 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중국 내 미디어의 강경한 대북비판 담론을 촉발시켰다. 핵실험 다음날 환구시보의 사설은 '북한이 이번(3 차) 핵실험을 통해 안보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천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Global Times*, 12 February 2013). 2 월 17 일 사설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날은 북한에 대해 반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며, 북한의 행위들은 중국의 국익에 대치된다고 주장했다(*Global Times*, 17 February 2013). 사설은 “반드시 응징해야 하며” (惩罚是必要的, *chengfa shi biyao de*), 중국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호”(一味庇护, *yiwei bihu*)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개적 대북비판은 이례적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와 포용정책의 폐기에 대한 담론을 관영미디어가 제시한 것이다.

다른 신문의 사설들은 환구시보에 비해 약한 주장을 실었다. 2 월 16 일 사설은 중국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不切实际的假设, *buqieshiji de jiashe*)이며, 따라서 중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중재자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지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한미일과의 관계보다 퇴보시키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에 중국이 현재 대북포용정책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제 1 의 적” (头号敌人, **touhao diren**)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 십년 동안 발전시켜온 북한과의 양국관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셴뎡리(**Shen Dingli**)와 장렌꾸이 (**Zhang Liangui**)는 북한이 “핵(유지)의 길”(核道路, **he daolu**)로 나아갈 것이라 지적하였다.

셴뎡리(**Shen Dingli**)는 더 나아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다른 방법이 없기” (无奈接受, **wunai jieshou**) 때문에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인홍(**Shi Yinhong**)은 북한의 행동을 중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북한은 오직 자국의 이해만 고려할 뿐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¹⁰. 또한 평관치옌(**Peng Guanqian**)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세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와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아니다. 셋째, 중국은 혼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가지 논점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중국책임론에 대한 방어적 논리를 가진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이 아님으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함의를 지닌다.

덩위웬(**Deng Yuwen**)의 ‘북한포기론’ 담론

중국 공산당 당교의 부편집장의 영문기고가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을 서방과 한국으로 확산시켰다. 2013 년 2 월 27 일 덩위웬(**Deng Yuwen**)은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FT**)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나? (**Should China abandon North Korea?**)’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다. 그의 핵심주장은 중국이 역사, 이념,

¹⁰ Hu Yihu, broadcast discussion including Su Hao, ShiYinhong, and Peng Guangqian, “If China ends its oil exports to North Korea, the 1.1 million-strong military will be brought to its knees”, Yihu yixitan – Phoenix TV, 24 February 2013.23

전략의 이유로 인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포기(放棄, **fangqi**)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통제불능이며, ‘부정적인 자산’ (负资产, **fu zichan**)이 되었다고 전제한다.

덩위웬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념적인 이유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다. 이념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이 아니며, 만약 이념이 외교의 근간이라면 서방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간의 이념적 차이가 중국과 서방과의 이념적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둘째, 북한 지원의 군사전략의 필요성은 과장되었다. 북한은 냉전시대에는 유용한 완충지대였지만, 현대 전쟁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북한은 완충지대로서 그 자체가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반드시 다른 나라(북한)를 대신해서 미국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덩은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개혁개방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중국이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셋째,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인 감정을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호의적인 감정은 순망치한(唇亡齿寒, **chunwang chihan**)의 역사적 친밀성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 덩은 북한이 자신의 동맹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럴 때 중국은 북한 핵무기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가지 주장과 더불어 덩(Deng)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포기하는 방향의 대북외교정책을 추진하거나 비핵화를 위해 친중국 정권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내정불간섭 (不干涉政策, **bu ganshe zhengce**)’ 외교원칙을 ‘제한적 간섭(有限干涉, **youxian ganshe**)’으로 바꾸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덩의 ‘북한포기론’의 담론은 중국의 새로운 이념정체성과 북한의 대중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외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북한보다 서양에 가깝게 평가한다. 둘째, 북한의 내재적 정체성과 완충지대로서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평가한다. 북한정권의 ‘고정불변’, ‘부정적 자산’, ‘위험’의 표현을 통해 북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덩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북한을 표현하는 언어인 ‘북한의 내재적 문제와 고정불변성’, ‘안보위협’등은 과거 ‘북한붕괴론’ 담론의 핵심논리와 일치한다.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비교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덩(Deng)의 기고문 주장은 중국의 다른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중국의 현대국제관계학 연구소의 연구원인 렌웨이동(Ren Weidong)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비판한다. 미국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재구성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화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렌(Ren)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추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그는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의 전략적 보호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현대전의 기술적 발전이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면, 왜 미국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두는지에 대해 반문한다.

렌웨이동(Ren Weidong)과 덩위웬(Deng Yuwen)의 담론은 북한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보여준다. 첫째, 덩(Deng)이 한반도 안보문제의 핵심원인을 북한 정권의 내재적 요인에 두었다면, 렌(Ren)은 북한의 대외조건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두고 있다. 둘째, 덩(Deng)은 북한을 부정적인 담론으로 묘사했다면, 렌(Ren)은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여전히 부합하는 긍정적인 담론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자산’ (负资产, fu zichan)과 ‘전략적 균형추’가 부정과 긍정의 묘사로 대비된다. 또한 렌(Ren)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맹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주한미군을 예시로 제시하며,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IV. 미국과 한국 미디어의 ‘중국 대북포기론’ 담론 재구성

미국의 미디어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실고 있다. 2003년 6월 4일 *Washington post* 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서진영, 2006, 365).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정부가 북한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New York Times*, *Foreign policy* 등의 미국 미디어에 2002, 2009,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학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실리고 있다. 이 기사들의 주된 논조는 북한의 핵실험, 악화된 경제상황, 김정일의 사망

등의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학자들의 1 차적인 담론은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를 통해 ‘북한붕괴론’으로 재구성된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국익을 위해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학자들의 믿음이 마치 중국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담론은 미국이나 한국학자들을 통해 중국의 정책변화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고,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실질적인 제도나 경제지원의 수치변화와 관계없이 예측이나 학자들의 담론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중국 내 비국가 행위자들의 담론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덩위유엔(Deng Yuwen)의 ‘북한포기론’ 담론은 서방과 한국에서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의 근거로 제시되었다.¹¹ 영국의 대표적인 한국전문가인 아담 캐스카트 (Adam Cathcart)는 덩위유엔(Deng Yuwen)의 글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였다.¹²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또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흥미롭게 접근한다 (Fareed, 2013).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와 많은 대화를 했던 키신저(Kissinger) 또한 중국의 북한포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은 그들의 동맹(북한)을 포기하거나 미국과 그것의 붕괴에 대해 유착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 하나의 사건이나 오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에 그것이 발생하면, 중국과 미국이 빠르게 대응하는 과정에 위험이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선 우리는 심각한 전략대화를 제안해야 한다. 중국이 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는 직감한다.¹³

¹¹ 'Deng Yuwen and North Korea'를 입력했을 구글에 검색할 때 12800 개의 학술지 및 잡지가 검색되었다. 대부분이 중국의 대북정책변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Deng 의 논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국의 웹사이트는 Deng 의 신분을 중국공산당 당교의 저널 부편집장이 아닌 고위급 정책결정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http://www.kdec.re.kr/board/bbs_viewbody.php?code=bbs_edu_pds&page=1&number=389&keyfield=&key=&PHPSESSID=69d425072d907612b7f31128f06c86b2

¹² "Deng Yuwen: "Once he's traveled around, Kim will realize North Korea can't live without China"

¹³ "The Chinese will not want to be seen as abandoning an ally or colluding with Washington in planning its demise. They know that there is now a real danger of an accident, incident or miscalculation on the Korean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급 관리자도 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한다. ‘중국은 안정은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자라는 것을 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담당자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의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중국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북한이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덩(Deng)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부정적 자산’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다.

한국 미디어들도 위에 설명한 ‘중국의 대북포기론’을 주장하는 중국학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중국정부가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북한 전문가와의 대담형식을 통해 중국정부가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는 다른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미디어에서 다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는 스인홍, 선지루, 장렌구이가 있다. 중국 국무원 외교전략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인민대의 스인홍 (時殷弘) 교수는 미국의 대북강경파였던 부시 정부의 대북봉쇄정책과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스인홍 교수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⁴ 스인홍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으로 인해 “매우 귀찮은 이웃”을 얻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그는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북한 붕괴가 중국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삼단계 논법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붕괴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은 자연히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미국 영향력이 감소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붕괴가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비정상 국가인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중국과 북한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Peninsula. If that happened, there is a danger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end up reacting quickly, viscerally and in ways that might make things much worse — even lead to conflict. To prevent this scenario, we should propose serious strategic talks. My instinct is that the Chinese are ready to have this conversation.” (Taylor, 2013)

¹⁴ 스인홍 인터뷰-2013.8.4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decono/201308/e2013080416404169760.htm>)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의 주임인 선지루의 담론은 중국과 북한간의 제도적 변화를 강조한다. 선지루 박사는 중국과 북한이 과거에 체결한 양국간의 조약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관계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이 상호 방위를 약속한 상호우호협력조약 제 2 조는 현시점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¹⁵ 중국과 북한의 우호동맹조약 중에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지루 박사는 상호우호협력조약을 개정하면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의 환상을 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약개정은 중국이 핵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국에게 가장 의존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경제와 군사이다. 중국의 군사적 지원은 물리적인 지원보다 양자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조약을 개정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정권안정성은 취약해지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선지루 박사는 북한에게 제공해왔던 조약을 통한 억제력을 포기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억제력만을 완전히 신뢰했다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담론에 내재된 가정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로 재임했던 북한통으로 불리우는 중국학자는 장렌구이는 북한을 특수한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내부통치력을 강조한다(문정인, 2010). 북한의 정부체제에는 당, 군, 보위부 경찰 체계 등 모든 것이 잘 운용되고 있으며, 한 순간에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치, 경제, 무력 제재를 동시 또는 점진적으로 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스인홍 교수는 북한정권이 붕괴가 되어도 중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니, 북한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장렌구이는 북한의 붕괴가 중국에게 불이익일 수 있으나, 북한정권의 통치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좀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¹⁵ 서진영. 2006. 21 세기 중국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 35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7038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세 학자의 담론이 추구하는 목적은 중국의 국익강화이다. 세 학자의 담론은 다음의 주장을 담고 있다. (1) 중국의 국익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며 하며, (2) 그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하며 (3) 그러한 압박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게 추동하거나, 붕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혈맹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고려보다는 철저한 중국 국익중심의 해석이다. 기존 중국의 정책기조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경제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 담론들의 내포하는 논리적 공통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렌구이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도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북한의 생존가능성을 주장하는 비합리성은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중단이라는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가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점에서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중국학자들과의 비공개 세미나¹⁶에서 제기된 발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포기론’이나 대북강경 발언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관련이 있다.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관련 학술회나 세미나에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중국학자들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아니며, 한국정부의 강경기조에 맞는 발언을 하는 하는 학자들을 초청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의 학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군관료들도 한국의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되어 북한의 붕괴 이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군 관료들이 만나서 북한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담론구조는 1990년대 북한붕괴론과 논리적 유사성을 가진다. 두 담론의 북한에 대한 미래예측은 붕괴되거나 정권이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고난의 시기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조건은 북한이 단기간에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¹⁷.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¹⁶ 2015년 11월 연변, 북경, 서울에서 진행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세미나에서 중국의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다. 중국정부의 북한관련 발언에 대한 통제로 인해 중국학자들의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¹⁷ 북한 붕괴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들은 다음의 논문에 실려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김정일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북한 붕괴는 Forster-Carter(1994, 32), Noland (2002, 14-15), Eberstadt, 1995, 139)가 주장했으며, 몇몇의 서방학자들은 이 시기 한국중심의 통일을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axwell, 1996; Green 1997; Oberdorfer, 1997; Koh, 1998).

김영삼 정부시기 청와대와 외교부 대부분의 관료들은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 믿었고, 미국의 행정부 및 학자들도 북한붕괴론을 강력하게 믿었다(Kim, 2013). 중국의 북한포기론 또한 북한이 단기적으로 체제가 급변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1)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북한 내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3)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은 생존할 수 없기에 북한의 국가체계가 붕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결론이다.

둘째, 두 담론의 핵심주체가 다르다. 1 세대 북한붕괴론 담론의 핵심주체는 북한내부의 엘리트이다. 북한경제위기와 최고지도자의 전환시기를 어떻게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 세대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와 외교적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1,2 세대 담론 모두 북한 체제의 급변이라는 미래 예측은 공유하지만, 북한체제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행위자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차별성은 두 가지 가정에 의한 것이다. 첫째, 중국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거나 변화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의 근거가 중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대북정책의 담론의 분화이다.

Table 1 북한붕괴론과 중국의 북한포기론

	1 세대 담론 (북한 붕괴론)	2 세대 담론 (중국의 북한포기론)
북한에 대한 전망	북한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중국의 지원 없이 북한은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체제변화의 핵심행위자	북한의 정치엘리트	중국의 대북외교 정책결정자
핵심이슈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 이후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2013년 3차 핵실험과 김정일의 사망 후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의 방향

V. 중국 '대북포기론'의 외교적 실천

그렇다면 중국 학자들의 1 차 담론과 미국과 한국에서 재구성된 2 차 담론에 비추어 중국의 실제 대북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이번 절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3 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이 후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외교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핵심논리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중국의 유엔결의안 제재와 독자적인 경제제재가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3 차 핵실험 이후 유엔제재결의안 참여와 중국정부의 공식외교수사는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하는 듯 보였다. 시진핑은 2013 년 3 월, 보아오(Boao) 포럼에서 ‘아무도 지역이나 전 세계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고 북한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력한 비판발언을 했다(Noesselt, 2014). 중국외교부장 왕이도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결정적으로 중국정부는 유엔의 2013 년 2087 결의안(1 월)과 2094 결의안(3 월)을 지지하였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실행된 이후 비핵화, 안정, 냉정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조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¹⁹ 이러한 중국의 유엔제재참여와 강경한 외교수사에 대해 북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2 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외교적 실천과 공식적 수사는 실제로 변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실천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측면에 있어 실효성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종운과 홍이경(2013, 94-95)은 북중간의 관행화된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중국정부의 UN 대북제재 결의안을 형식에 그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간의 무역은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접경지역에서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과 사치품, 기타 허가되지 않는 금수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관계는 국제적 규범을 벗어나는 비공식적 거래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거래방식이기에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두 나라 사이의 접경지역 경제교류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전국 경제순위에서 최하위권을 다투는 동북 3 성(2015 년 1-4 월기준,

¹⁸ 실제로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공급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중국의 대북 지렛대의 자원으로 인식된다(Snyder, 2014).

¹⁹ 반대성명의 핵심내용은 첫째,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핵확산 방지, 셋째,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 넷째, 각 당사국들의 냉정 유지 및 6자 회담의 강조였다.

흑룡강 4.8%, 요녕 1.9%, 길림 5.8)은 북한과의 수출입이 가장 많은 지방이다.²⁰ 중국의 저명한 한반도 학자²¹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4 대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의 북한간의 거래유지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3 차 핵실험 이후 지방정부의 이러한 묵인은 중국공산당 중앙회의에서 비판 받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경제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Snyder, 2014)는 중국의 자원수요적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간 경제교류의 지속성을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의 지속은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지정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스나이더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의 필요성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 년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 교류액은 65 억불로서 2012 년에 비해 10 퍼센트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북한의 3 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제재참여와 장성택의 숙청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교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2 년 겨울의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2013 년 겨울 북한 3 차 핵실험 이후의 두 나라간 경제교류의 축소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의미는 두 나라의 연말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장과 무역교류가 줄어들거나 중단된다. 블룸버그 자료(Bloomberg, 2015)에 의하면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2015 년 5 월에 40 퍼센트나 급감한다. 이 시기 베트남의 대중 선탄 수출량의 91 퍼센트가 감소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량은 25 퍼센트나 증가한다. 대중 석탄 수출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몽고나 러시아를 추월하여 오스트리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3 위 수출국이 되었다. 런던의 원자재 조사기관의 관장 조지 슬라보브(Geogi Slavov)는 북한이 중국의 무연탄 1 위 수출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또한 북한과의 새로운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Taylor, 2013, 86).

VIII 결론

본 연구는 서론에서 탈냉전시기 중국외교 담론들이 (1) 중국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구성 및 재구성되는지 (2) 중국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담론이 어떻게 서방이나 한국에서 재구성되는지 (3) '중국의 대북포기론' 담론과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의 실천적 차이를

²⁰ 2015 년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한반도 관련한 비공식회의에서 연변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박용국의 발표자료 참고.

²¹ 비공식적으로 중국공산당에 한반도 관련한 보고서를 올리는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된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중국학자들의 담론은 중국의 관영신문인 환구시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제시된다. 특히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학자와 자유주의 학파들이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장한다.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중단이나 양국간의 제도적 변화를 규범적으로 주장한다. 둘째, 중국내 북한포기론의 담론은 해외에서 각 나라의 맥락에 따라 재구성된다. 특히 한국의 정부나 몇몇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중국 학자들을 초청하거나 그들의 담론을 한국에 소개하는 형태로 중국의 북한포기론을 재확산하였다. 셋째,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핵심주장과 달리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가 북한의 일방적인 의존적 교류에서 상호의존적 경제교류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인해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의 비국가 행위자의 대북 외교정책에 관한 담론은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의 실천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 시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하는 ‘담론과 실천’의 이론을 실증연구에 좀 더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 부분에서 ‘담론’과 ‘담론경쟁’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학자들의 담론개념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대외정책연구를 위한 담론분석틀을 위한 이론의 깊이가 부족하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담론형성 및 확산을 통해 대중국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 북한관련 비정부 행위자(학자, 정치분석가, 기자)와 정부 행위자 (정책실무자, 고위관료)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중국 내 대북정책의 변화 동향과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Bloomberg, "North Korea gains in China coal shipments as Vietnam bows out", July 20, 2015, <http://www.thanhniennews.com/business/north-korea-gains-in-china-coal-shipments-as-vietnam-bows-out-49149.html>

Campbell, D. 1992.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U of Minnesota Press.

Cao, Qing. 2007.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 (5):431-450.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The Korea Crisis." *Foreign Policy* :20-28.

Chen, Xiaomei. 2002. *Occidentalism: a theory of counter-discourse in post-Mao China*: Rowman & Littlefield.

Chilton, Paul, Hailong Tian, and Ruth Wodak. 2012. *Discourse and socio-political transformations in contemporary China*. Vol. 42: John Benjamins Publishing.

Deng, Yong, and Fei-Ling Wang. 2004. *China rising: power and motiva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February 27, 2013. <http://www.ft.com/cms/s/0/9e2f68b2-7c5c-11e2-99f0-00144feabdc0.html#axzz2y7DUqFhL>.

Deng Yuwen, "Should China abandon North Korea?", *Liaowang Zhongguo - China Outlook*, No. 199, March 2013.22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ditorial,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China should not be cowardly, delusional, or prickly", *Huanqiu Shibao - Global Times*, 17 February 2013.

Editorial, "China's participation in the regim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st have a degree of intensity", *Huanqiu Shibao - Global Times*, 18 February 2013.

Editorial, "Winds of urgency blow across the Korean peninsula, China needs to focus its strategy", *Huanqiu Shibao - Global Times*, 16 February 2013.

Fairclough, N. 2001. *The discourse of new labou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s data: A guide for analysis*, 1, 229-266.

Fareed Zakaria, "Fareed Zakaria: North Korea's high-stakes bluster", *Washington post*, March 13, 2013.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fareed-zakaria-north-koreas-high-stakes-bluster/2013/03/13/b24f2cbe-8c1b-11e2-b63f-f53fb9f2fcb4_story.html.

Feng, Zhu. 2006. "Shifting Tides: China and North Korea." *The Architecture of Security in the Asia-Pacific*:45.

Finlayson, Alan. 1998. "Ideology, discourse and national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3 (1):99 - 118.

Foucault, M. 201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Vintage.

Glaser, Bonnie, Scott Snyder, and John S Park. 2007.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Ji, You.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28):387-398.

Katzenstein, Peter J.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Kim, Samuel S. 2001.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371-408.

- Koo, Gloria. 2006. "China and North Korea."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Larsen, H. (2005). *Foreign policy and discourse analysis: France, Britain and Europe* (Vol. 10). Routledge.
- Hansen, L. (2013). *Security as practice: discourse analysis and the Bosnian war*. Routledge.
- Nanto, Dick K, Mark E Manyin, and Kerry Dumbaugh. 2010. "China-North Korea Relations."
- Noesselt, N. (2014). China's contradictory role (s) in world politics: decrypting China's North Korea strategy. *Third World Quarterly*, 35(7), 1307-1325.
- Renwick, Neil, and Qing Cao. 1999. "China's political discourse towards the 21st century: Victimhood, identity, and political power." *East Asia* 17 (4):111-143.
- Romberg, Alan. 2009. "China and North Korea."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 Schmidt, V. A. 2001. The politics of economic adjustment in France and Britain: when does discourse matter?.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8(2), 247-264.
- Schmidt, Vivien A. *The futures of Europea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cobell, Andrew. 2004.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DIANE Publishing.
- Scott Snyder, "China-North Korea Trade in 2013: Business as Usual" 24 March, 2014, <http://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14/03/27/44/>
- Shen Dingli,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ten years on", *Caijing*, 18 February 2013.25

- Schmidt, Vivien A., and Claudio M. Radaelli. "Policy change and discourse in Europ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est European Politics* 27.2 (2004): 183-210.
- Snow, David A., et al.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6): 464-481.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1 (1988): 197-217.
- Taylor, Brendan. "Does China Still Back North Korea?." *Survival* 55.5 (2013): 85-91.
- Wu, Anne. 2005.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28 (2):35-48.
- Zehfuss, M. (2002)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 박병석. 2009. "중국화평굴기론 (中國和平굴起論): 그 전개와 변형에 대한 담론 분석." *현대중국연구* 10 (2):73-121.
- 이성현. (2014). 장성택 숙청과 북중 관계의 관성. *성균차이나브리프*, 2(1), 116-121.
- 이종운, 홍이경. 2013.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희옥. 2012. "중국학자들이 보는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대한 솔직한 인식 [中國絶起大戰略: 與中國知識精英的深層對話]." *동아시아 브리프* 7 (3):104-105.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아, 2006.
- 전재성. 2013.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과 중견국 외교론."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147):2-3.
- 주재우. 2010. "일반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글로벌정치연구* 3 (2):63-84.
- 차창훈. 2003. "중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37 (1):243-265.